北韓의 開放展望과 南北韓 經濟協力

延 河 清
金 炯 元

本稿에서는 최근 韓半島 周邊情勢의 變化와 北韓의 開放展望 및 현재 추진중에 있는 南北韓 經濟交流의 現況을 분석한 다음,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南北韓 經濟協力의 基本方向과 物資交流 및 合作投資의 推進 등 實質的인 經濟交流·協力方案을 제시하였다.

현재 北韓이 처해 있는 對內外的 狀況은 北韓의 開放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어, 北韓은 南北韓 UN 同時加入을 계기로 침체된 북한경제의 회복을 위해 UNDP, UNIDO 등 國際機構를 통한 對西方 經濟協力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南北韓 經濟協力의 增大로 연계될 것이다.

그러나 初期段階의 南北韓 經濟協力은 분쟁의 요소가 적고 또한 南北韓 關係改善의 波及效果가 큰 분야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며, 쌍방의 수용이 가능한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하여 현행 間接貿易形態에서 直接貿易形態로 발전시키고, 제3국으로의 共同進出, 南北韓 經濟協力側面에서의 間接·直接投資에 이르는 段階別 接近이 필요하며, 연쇄효과(linkage effect)의 극대화를 위해 多段階 同時推進의 柔軟性도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南北韓 經濟交流의 基本目標는 民族經濟共同體를 형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므로 점차 活性化가 예상되는 南北韓의 經濟交流·協力의 推進은 交易段階, 資本·技術協力段階뿐만 아니라 民族經濟共同體 形成 이후 南北韓 產業構造調整 必要性 등 전체의 흐름을 염두에 두고 반드시 長期的인 視角에서 一貫性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I. 序 論

최근 國際情勢의 急變, 體制內的 矛盾의 增大, 심각한 經濟難 등 北韓이 처해 있는 對內外的 狀況은 北韓의 開放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 北韓은 지난 40여년간 전형적인 自力更生原則에 의한 中央集權的 計劃經濟로서 폐쇄적인 經濟政策을 고수해 온 결과 資本의 不足과 技術의 落後로 인한 經濟沈滯로 西方의 資本과 先進技術을 도입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 할 수 있다. 또한 北韓經濟는 軍·產複合體를 유지함에 따라 극심한 產業間 不均衡

筆者：延河清—本院 北韓經濟硏究센터 所長
金炯元—本院 主任硏究員

* 本稿의 작성시에 귀중한 論評과 助言을 아끼지 않은 本院의 朱鶴中 博士와 全洪澤 博士께 깊이 감사드린다.

을 초래하였으며, 輕工業 특히 消費財産業의 落後로 주민들의 불만은 이제 더 이상 主體思想만으로는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더욱이 점차적인 情報流入에 따라 외부세계와의 비교를 통한 주민들의 消費水準 向上慾求가 분출될 경우 북한은 開放을 촉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외적으로는 東歐圈 國家들의 改革·開放化 趨勢뿐만 아니라 최근 北韓의 最大 交易相對國인 中國과 蘇聯이 對北韓貿易에 적용하여 오던 '友好價格'을 폐지하고 國際價格에 의한 硬貨決濟를 요구하는 등 기존의 對外經協基盤이 붕괴되어 북한은 西方國家들에서 새로운 經濟協力 相對를 구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현재 北韓은 남북한 UN동시가입 및 對日本 國交樹立을 서두르고 있으며 南北對話에도 비교적 적극적으로 응해 오고 있는데 이와 같은 변화는 南北韓 關係改善을 촉진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최근 韓半島 周邊情勢의 變化와 北韓의 開放展望을 살펴보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 南北韓 經濟交流의 現況을 분석한 다음,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南北韓 經濟協力의 基本方向과 物資交流 및 合作投資의 推進 등 實質的인 經濟交流·協力方案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II. 韓半島 周邊情勢의 變化와 北韓의 開放展望

최근 社會主義圈의 質的 變化에도 불구하고 北韓은 중앙집권적 計劃經濟下에 閉鎖的인 政策을 고수하고 있으나 國際情勢變化, 體制內的 矛盾의 증대, 그리고 金日成 이후 權力移讓의 불투명 등 北韓이 처해 있는 內外的 狀況은 北韓의 體制變化를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韓半島 周邊情勢의 變化 및 北韓 經濟開放政策의 現況을 분석한 다음 앞으로 북한의 開放展望이 南北韓 經濟協力에 미칠 影響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韓半島 周邊情勢 變化

1980년대에 걸쳐 世界情勢는 몇가지 뚜렷한 變化趨勢를 보여왔는데 그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社會主義圈의 崩壞, 太平洋經濟圈의 浮上 및 地域經濟圈의 대두이다. 즉 蘇聯과 東歐國家들의 改革과 開放, 獨逸의 統一, EC統合 및 北美經濟圈 形成 등 地域經濟圈의 등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세계정세의 변화는 韓半島를 둘러싼 周邊國의 對韓半島 政策에 변화를 초래하여 1990년대 南北韓 關係를 개선시키는 데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蘇聯은 太平洋地域에서의 영향력 강화라는 政治的 目的과 국내의 經濟的 難局打開 및 遠東地域開發 등의 經濟的 目的으로 북한 위주의 韓半島政策에서 탈피하여 韓·蘇修交 등 韓國과의 關係改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東西緊張緩和에 의해 理念의 중요성이 감소함에 따라 소련은 단순히 社會主義 兄弟國이었다는 이유만으로 北韓-蘇聯關係가 규정될 수 없다는 입장이며, 北方島嶼問題 등으로 인하여 日本의 經濟協力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하에서 韓國이 시베리아개발과 國內 消費財不足問題를 해결하는 데 큰 기여를 하리라고 기대하고 있다. 특히 蘇聯은 최근 脫共產化

및 聯邦解體 움직임 등 政治構圖變革에 따라 經濟改革을 보다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되어 周邊國과의 經濟協力 必要性은 더욱 증대될 전망이어서 南北韓에 대한 再評價와 함께 韓國과의 關係를 더욱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中國은 지속적인 經濟發展을 위해 韓半島의 安定을 원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對北韓 友好關係를 유지하면서도 南韓과의 經濟關係를 확대해 나가려는 兩面的인 接近政策을 취하고 있다. 1970년대 후반기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中國의 現代化計劃은 대내적으로는 정치적 안정을 필요로 하고, 대외적으로는 안정된 안보환경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中國은 東北亞地域의 안정과 이에 기초한 西方世界와의 關係改善이 國家現代化에 필수불가결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中國의 立場에서 南韓의 重要性이 부각되고 있는 이유는 中國의 經濟開發이 美·日企業들의 참여만으로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南韓이 中國農產物의 市場으로서, 輕工業品의 供給과 生產技術의 파트너로서, 혹은 部品의 供給地로서 中國의 經濟發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인데 中國은 현재 天津·靑島 일대에 韓國專用工團 設置를 서두르고 있고 南北韓 UN同時加入을 계기로 韓國과의 國交樹立 또한 가시화시킬 전망이다. 한편 中國은 최근 蘇聯共產黨의 붕괴로 야기된 體制危機를 극복하려는 대내적인 노력과 함께 공동의 危機意識을 느끼고 있는 北韓의 政治·經濟的 安定을 위해 對北韓 經濟·軍事支援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북한과의 紐帶關係를 강화하고 있는데, 소련·동구권의 체제변화가 근본적으로 경제침체에 기인하고 있고 1988년 이후 中國의 經濟成長率이 급속히 둔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1], 經濟的인 側面에서는 經濟開放, 市場經濟體制로의 移行에 보다 적극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南韓과의 關係改善도 지속하려는 兩面政策을 계속 취할 것으로 보인다.

美國은 財政赤字의 축소와 軍縮의 일환으로서 주한미군의 감축과 팀스피리트훈련의 축소를 고려하고 있으며 對北韓政策에 있어서도 외교관 접촉재개, 高位人士의 訪北 및 民間交流의 奬勵 등 과거의 엄격했던 제한을 완화하고 있다. 美國은 韓半島安定은 기본적으로 北韓의 對南政策 轉換에 달려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北韓의 외교적 고립보다는 책임있는 國際社會의 一員으로 받아들이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현재 美國은 關係改善의 선행조건으로 北韓에 대해 核安全協定 締結, 테러活動禁止, 南北對話의 進展 등을 제시하고 이를 北韓이 이행하기 전까지는 연락사무소의 개설과 같은 北韓과의 外交關係 改善을 고려치 않고 있는 입장이지만 北韓의 태도 및 韓·中關係의 개선 여하에 따라 美·北韓關係가 급속히 개선될 가능성도 높다.

한편 日本은 最近 國際情勢變化가 北韓과의 關係改善의 機會라고 보고 있어, 東北亞 秩序의 改編過程에서 韓半島에 대한 政治·經濟的 影響力을 증대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日本은 東北亞에서 影響力 擴大를 둘러싼 競爭國家인 蘇聯이 韓國과 수교함으로써 日本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에 제동을 가할 가능성에

1) 中國의 經濟成長率은 1987년 10.2%, 1988년 11.1%에서 1989년 3.8%, 1990년 4 8%로 감소하였다. ADB(1991), p.21 참조.

대한 우려와 對蘇 經濟協力에서의 韓·日 競合可能性 때문에 韓·蘇 關係進展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와 같은 日本의 立場은 최근 적극적인 對北韓 修交交涉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日本은 이를 통해 韓半島에 대한 政治·經濟的 影響力 擴大뿐만 아니라 장차 형성될 東北亞經濟圈의 주도적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韓半島 周邊情勢의 變化는 北韓의 開放化를 촉진시킬 것으로 보이는데 南北韓 UN同時加入을 비롯, 國際原子力機構(IAEA)의 核査察 受容意思 발표 및 南北高位級會談의 受諾 등 북한이 취하고 있는 일련의 유화자세는 이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최근 經濟·軍事的 側面에서 크게 의존해 왔던 蘇聯의 脫共產化로 蘇聯의 援助가 축소 내지 중단될 것에 대비, 中國과의 관계강화뿐만 아니라 西歐資本의 導入을 위해 美國·日本과의 關係改善 및 正常化에 노력하고 南北對話에도 계속 응해 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社會主義 改革·開放이 현실적으로 體制를 활성화시키기보다 오히려 脫社會主義의 길이 아니면 體制를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하는 등 社會主義體制 改革의 불투명한 전도로 인해 북한은 당분간 체제유지를 위한 內部統制를 강화하면서 政治體制의 變化 없이 어느 정도 경제발전을 이룩한 中國式 改革模型을 모방하여 체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經濟開放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2. 北韓의 經濟開放政策

북한은 현재 체제유지를 위해서는 主體思想의 이데올로기가 필요하고 침체된 經濟의 活性化를 위해서는 對外貿易의 擴大, 合營法을 통한 合作投資의 적극 유치 등 開放化가 절실한 형편이다. 북한이 開放化 趨勢에 따라야만 하는 이유는 첫째, 현재의 資本不足, 技術 및 生產施設의 낙후로 인한 경제침체를 타개할 수 있는 다른 돌파구가 없고, 둘째 지나친 폐쇄, 봉쇄적이라는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합리적인 융통성을 보여야 經濟技術交流가 용이하며, 셋째 권력의 부자승계측면에서 카리스마와 정통성이 약한 김정일의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도 開放化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켜 민심을 얻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北韓은 다른 社會主義國家들이 최근 적극적인 開放體制로 전환, 價格機構와 私有財產制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市場經濟模型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단지 선별적으로 外資와 技術 두가지만을 들여오는 데 집착하고 있는 불완전한 經濟開放政策을 취하고 있다.

北韓의 經濟開放化 推移를 살펴보면 '자력갱생원칙'에 입각하여 '자립적 민족경제의 건설'을 표방하여 온 북한은 1960년대 후반에 들어서서 中蘇紛爭으로 기대했던 중국과 소련으로부터의 원조가 무산되었고 국내산업성장이 둔화되는 한편, 남한의 빠른 경제성장으로 인한 자극 등으로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서방세계에 대한 경제적 폐쇄정책을 수정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즉, 自力更生原則의 경제적 폐쇄정책으로 거의 모든 산업부문에 걸쳐 기술수준이 낙후되고 생산시설이 노후화된 북한은 6個年計劃(1971~76년)의 목표달성을 위해 기술 및 플

랜트 등 대규모의 자본장비를 일본 및 유럽으로부터 수입하였는데, 현대적인 산업설비 및 기술도입을 위해 북한이 서방선진국과의 경제교류확대에 우선순위를 둔 1970~74년간 北韓의 對西方 輸入은 연평균 89.6%의 큰 폭으로 증가하여 1974년의 경우 北韓의 對OECD輸入은 전체 輸入의 51.7%로 증가하였다[2].

그러나 輸出의 기반이 되는 生產能力이 취약한데다 1973년의 '석유파동'으로 북한의 수입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수입증가와 세계경제의 불황 등으로 북한의 주요 수출품목인 비철금속 가격의 하락에 기인한 수출감소로 북한은 1970년대 중반 이후 채무상환불이행 사태에 처하게 되었다. 따라서 輸入代金의 마련과 그동안 누적된 債務辨濟를 위해 輸出增大가 절실히 필요하게 된 북한은 對內指向的 工業化를 위한 보완적 수단으로서만 貿易을 최소한으로 이용해 왔던 입장에서 탈피하여[3] 1979년 金日成의 新年辭에서는 최초로 對外貿易의 重要性을 공식적으로 거론하면서 輸出品 生產의 증대를 강조하였고 1980년 조선노동당 제6차대회에서는 1980년대말까지의 輸出額 增加를 工業總生產額 增加目標 3.1배를 상회하는 4.2배로 설정하였다[4]. 또한 1984년 1월 最高人民會議에서는 輸出品生產의 特化를 강조하면서 향후 5~6년 사이에 對社會主義圈 貿易額을 10배로 증가시키자고 하였으며, 같은해 9월에는 合作會社運營法(合營法)을 발표, 償還負擔이 없는 외국의 合作投資를 유치하여 資本 및 先進技術을 도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왔다.

특히 1980년대 중반 이후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북한경제로서는[5] 부족한 원료 및 자재의 원활한 공급뿐만 아니라 노후화된 기술 및 산업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수입증대가 불가피하여 이를 위한 자금확보의 필요성과 점차 가중되고 있는 債務의 辨濟를 위해 輸出의 重要性이 그 어느 때보다 크게 강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를 위해 북한은 현행 제3차 7개년계획(1987~93년)에서 貿易額의 증가목표를 社會總生產의 증가목표 1.8배를 훨씬 상회하는 3.2배로 책정하고 특히 수출산업의 육성을 위한 輸出品 生產基地의 設立과 輸出商品의 專門化·多樣化에 역점을 두고 있다[6]. 1980년대 중반에 착공하여 1990년대초 완성예정인 남포수출지역건설이나 최근 북한이 함경북도 청진, 나진, 선봉 일대를 經濟特區로 설정[7], 外國의 合作投資 誘致 및 蘇聯·中國·蒙古 등과 日本·東南亞를 연결하는 대규모 中繼貿易基地로 건설하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2) 延河淸(1986), p.182 참조.

3) 북한의 貿易은 經濟計劃의 일부로 포함되어 북한이 추구하는 '자력갱생'에 의한 '자립적 사회주의 경제건설'이라는 對內指向的 工業化를 위한 보완적 수단으로 단지 국내경제의 원활한 확대재생산을 위해서만 최소한으로 이용해 왔다. 즉, 수입은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거나 국내수요 충족에 부족한 상품에 한정시키고 수출은 수입에 필요한 외화획득을 위해서만 추진되어 왔다. 이러한 대내지향적 공업화정책이 지니는 커다란 문제점은 기술진보 및 생산증대를 위해 外貨需要가 필요불가결할 때 수출 이외에는 외화조달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4) 조선중앙통신사(1985) 참조.

5) 1987~90년의 4년간 北韓의 年平均 經濟成長率은 1.2%로 극히 부진하였고 특히 1990년의 경우 東歐圈 國家들의 改革·開放措置와 蘇聯 經濟事情의 악화 등 기존의 對外經濟基盤이 붕괴되어 -3.7%의 經濟成長率을 기록하여 휴전 이후 최악의 경제침체에 빠져 있다. 統一院(1991), p.3 참조.

6) 北韓의 최근 對外貿易, 특히 輸出擴大 努力에 관해서는 한수길(1991), pp.68~71 참조.

7) 『每日經濟新聞』, 1991年 8月 15日字 및 1991年 8月 31日字 참조.

〈表 1〉 北韓의 經濟開放化 推移

時 期	內 容	備 考
1972~74	・對西方交易 擴大期	・對OECD輸入이 總輸入의 51.7%로 증가
1979.1	・對外貿易의 重要性에 대해 최초로 공식적인 언급	・金日成의 新年辭
1980	・1980년대말까지 輸出額의 4.2배 증가	・朝鮮勞動黨 第6次大會
1984.1	・향후 5~6년 사이에 對社會主義圈 貿易의 10배 확대 및 對外經濟協力 對象으로 우호적인 資本主義國家들을 거론	・最高人民會議
1984.9	・合作會社運營法(일명 合營法)의 公布	・先進資本・技術의 導入 노력
1987	・第3次 7個年計劃期間中 貿易額의 증가목표 3.2배로 설정	・第3次 7個年計劃(1987~93년) 發表
1991.8	・'先鋒地域 經濟貿易地區開發 構想' 發表	

資料：韓國開發硏究院.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3. 北韓의 開放展望과 南北韓 經濟協力

현재 북한은 지속적인 경제침체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선진기술 및 자본도입을 통한 산업현대화가 필수적이지만 대서방 채무문제로 서구 선진국들로부터의 資本 및 技術導入先이 차단된 상태이고 최근 소련・동구권의 개혁에 따른 북한의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求償貿易 또한 감소하여 북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최근 1989년까지 북한 전체무역의 50% 이상을 차지하던 소련이 對社會主義圈貿易에 대해서도 종전까지 적용해 왔던 '友好價格'을 폐지하고 國際市場價格으로 전환함에 따라 北韓의 對蘇聯貿易, 특히 북한의 對蘇聯輸入이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미 소련의 북한에 대한 석유공급이 감소추세에 있고 價格 또한 1991년부터 국제가격으로 인상하는 동시에 硬貨에 의한 결제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화부족이 심각한 북한경제에 주는 타격은 매우 크리라 예상된다. 한편 최근 蘇聯의 脫共產化 및 聯邦解體 움직임으로 北韓의 對中國 依存度가 높아지겠지만 최근 북한의 중국과의 무역은 정체상태에 있고 북한의 對中國輸出은 오히려 감소추세를 나타내 왔다.

이와 같은 북한경제가 처한 대내외적 어려움은 북한으로 하여금 남북한 經濟交流增進에 나서게 할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그러나 경제외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난 40여년간 적대관계를 유지해 오면서 체제적 우위성을 주장해 온 북한이 북한주민에게 한국경제의 우위성을 인식시킬 우려가 있는 남북한 경제교류에 선뜻 응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북한이 최근 대내외적 경제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賠償請求權' 問題를 포함한 日・北韓 國交樹立 論議를 진전시키는 등 대일본 관계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북한의 제3위의 交易相對國으로서의 위치를 계속 차지하여 왔고 특히 채무문제로 서구선진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거의 차단된 1970년대 후반부터 북한의 對日本輸入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앞선 기술 및 시설을 도입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역할을 하여 북한의 대서방권수입의 50% 이상을 점유하여 왔다. 일본의 경우에 있어서도 비록 對北韓貿易이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미미하고 債務問題로 對北韓貿易의 상당부분이 조총련기업에 의해 이루어지는 '朝朝貿易'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현재 대북한무역은 일본의 對社會主義圈 貿易에 있어서 중국, 소련에 이어 세번째를 차지하고 있고 日·北韓關係가 개선될 경우 貿易量이 급증할 가능성이 크므로 일본의 입장에서도 日·北韓 關係改善은 韓半島 및 동북아시아에서의 政治的 立地를 확고히 한다는 목적을 떠나서 經濟的 側面에 있어서도 그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고 할 수 있다.

北韓·日本이 關係改善을 통하여 쌍방간에 經濟交流와 協力이 활성화될 경우 이로 인하여 북한이 얻을 수 있는 經濟的 利益은 침체된 북한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즉, 日本이 北韓에 제공하게 될 賠償金이나 經濟協力資金은 外貨 및 資金不足으로 실적이 부진한 제3차 7개년계획 사업을 마무리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賠償金規模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는 확실하지 않으나 韓·日協定 당시 日本이 韓國에 지불한 5億달러(무상 3億달러, 유상 2億달러)를 일본 엔貨를 기준으로 25년간 일본 都賣物價上昇率을 감안하고 이를 현재의 換率로 계산하면 대략 30億~40億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북한과 일본의 經濟交流 擴大가 南·北總理의 交叉會談이 실현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단기적일지는 모르지만 남북한 경제교류를 급속히 냉각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 경제교류의 확대가 동·서독의 경우와 같이 북한경제의 남한경제에의 흡수 내지 종속을 가져올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남북교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온 북한이 對內的 經濟與件의 악화와 國際環境의 變化로 운신의 폭이 좁아진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남북교류에 응해왔던 입장을 감안할 때, 일본의 經濟支援으로 경제문제가 일시적으로 호전될 경우 북한이 남북한 경제교류에 소극적이거나 비판적인 자세를 보일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한 경제교류의 추진에 보다 적극적이고 신축적인 자세가 요구되며 貿易을 포함한 일본의 對北韓經濟協力 또한 한국과의 갈등요소를 극소화하며 긍정적이고 상호보완적인 요소를 극대화함으로써 북한의 對外開放化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III. 南北韓 經濟交流의 現況

1. 物資交流 現況

南北韓 物資交流는 南北韓 交易의 開放과 南北韓 交易을 民族 內部交易으로 간주하는 1988년 7월 「大統領特別宣言」과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1988년 10월 「南北物資交流指針」의 제정으로 시작되었다.

南北韓間의 物資交易은 1990년 후반까지 直接交易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홍콩, 싱가포르, 일본 등 제3국을 통한 間接交易形態로 이루어졌으며 南韓을 최종 交易相對로 인정하지 않아 남한과의 間接交易조차 공식적으로 부인해 온 북한의 입장과 對北韓交易이 經濟的 實益이 별로 없다는 業界의 인식으로 소규모의 거래에 머물러 왔고 주로 남한측의 北韓物資搬入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즉 南北韓 交易의 어려움은 북한의 自立的 民族經濟 建設路線과 產業構造의 脆弱性에도 원인이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南北韓의 交易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政治的 關係改善 없이는 南北韓의 經濟交流에도 한계가 있다는 데에 근본적으로 기인하였고, 또한 안정적인 去來先確保의 어려움, 間接交易으로 인한 費用上昇, 品質 및 納期에 대한 불안, 交易關聯情報의 不在 등 間接交易 自體의 한계를 노출시켜 왔다[8].

그러나 최근 南北 總理會談 등 일련의 남북한간 대화가 지속되었던 1990년 4/4분기부터 間接交易形態의 南北韓 物資交流가 活性化되기 시작하여 物資搬入規模의 增大뿐만 아니라 그 당시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南韓商品의 對北韓搬出 또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고 거래형태에 있어서도 物物交換이 증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1991년에 들어와서는 南北韓 物資交流가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北韓物資搬入의 경우 1988년 10월~1990년말까지의 搬入規模가 4,150.4萬달러인 데 비해 1991년 1월~8월까지 8개월간의 搬入規模는 1億 1,228萬달러에 달하고 있다. 對北韓 物資搬出의 경우도 搬入에 비해 그 規模가 상대적으로 작기는 하지만 1988년 10월~1990년말까지는 473.1萬달러로 미미하였으나 1991년에 들어와 1,257萬달러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南韓企業으로 하여금 일방적인 搬入形態의 交易에서 탈피하여 搬出·入을 연계한 求償交易形態로 北韓과 교역하도록 권장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9].

특히 금년 4/4분기에 북한이 신축중인 관광호텔 등에 들어갈 컬러TV 등 3千萬달러 상당의 電子製品 搬出相談이 현재 진행중인데다 直交易契約에 따른 제2차 對北韓 쌀搬出 또한 금년내에 이루어질 전망이어서 1991년 南北韓交易規模는 2億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여 南韓은 蘇聯·中國·日本과 함께 北韓의 4大 交易國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物資交易이 시작된 1988년 10월 이후 1991년 8월까지 對北韓 搬入商品의 品目別 構成을 살펴보면(附表 1 참조), 總搬入承認額 1億 5,379萬달러 중 動物性生產品 16.2%, 植物性生產品 11.1%, 무연탄, 시멘트 등 鑛物性生產品 12.7%, 아연괴, 연괴, 전기동, 빌릿, 열연코일, 선철 등 卑金屬 및 그 製品이 47.0%, 금, 은 등 貴金屬이 6.5%, 기타 6.5%로서 北韓의 전통적 主要輸出品目인 金屬類 및 鑛物性生產品(66.2%)의 搬入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단일품목으로는 아연괴가 4,554萬달러(3.8萬톤)로 최다 반입되었다. 對北韓 搬出品目은 1990년 9월까지는 담배필터, 잠바, 설탕의 세 품목에 한정되었으나 1990년 10월~12월 양말편직기, 테트론 솜 등이 반출되었고 1991년에 들어와서는 고밀도폴리에틸

8) 韓國貿易協會(1990) 참조.
9) 統一院, 『南北交流協力動向』, 1991.7, pp.4~14 및 1991.8, pp.4~9 참조.

렌·비닐박막·고유황 경유 등 석유화학제품, 쌀, 컬러TV·냉장고 등 家電製品, 직물류, 세탁비누 등 생활일용품이 반출되는 등 다양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附表 2 참조), 그 중 농업용 비닐인 고밀도폴리에틸렌이 단일품목으로서는 최다 반출되었고 對北韓 쌀搬出은 南北韓 최초의 直交易契約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한편 최근 北韓이 가시화하고 있는 先鋒, 淸津, 羅津 일대의 經濟特區建設計劃에 南韓企業의 參與可能性이 높아짐에 따라 이 지역에서의 南北韓 合作投資 論議가 활발히 거론되고 있다. 금년 들어 南韓 經濟人의 北韓 經濟人 接觸承認은 60件에 이르고 있는데 이 중 절반가량이 南北韓 合作生產을 위한 것이어서 조만간 南北韓 合作投資가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合作希望分野로는 南韓側이 勞動集約的인 纖維·縫製·電子製品組立產業 등을 원하고 있는 데 대해 北韓側은 消費財部門을 희망하고 있다고 전해지며, 投資方式은 南韓側이 資本과 技術을 제공하고 北韓은 人力을 공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2. 南北韓 直交易의 現況

북한의 南北韓 物資交流에 대한 否定的 態度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南北韓 直交易은 1991년 3월 남한의 천지무역상사와 북한의 금강산국제무역개발회사간에 최초로 남한의 쌀과 북한의 무연탄·시멘트의 物物交換方式의 直交易契約이 체결됨으로써 南北韓 經濟交流의 새로운 轉機를 맞고 있다.

이와 같은 直交易의 成事는 북한이 남한과의 物資交流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는데 현재 南北韓間 政治的 立場 때문에 直交易의 推進實績은 미미한 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나 북한이 앞으로 남한과의 物資交流에 보다 적극적으로 응해 오리라는 것을 예상하게 한다[10]. 이에 앞서 1991년 2월 南韓의 두성통산과 북한의 금강산국제무역개발회사간에 直交易 合意가 있었는데 두성통산은 1991년 2월 65萬달러 상당의 북한산 도자기, 병풍, 그림, 부채, 수공예품 등을 부산항을 통해 반입, 30萬달러는 美달러貨로 결제하고 나머지 35萬달러는 織物을 반출할 예정이었다.

南北韓 直交易이 가능했던 요인은 間接交易조차 공식적으로 거부했던 입장에서 直交易을 공식 인정할 정도로 심각해진 북한 경제사정의 악화가 근본원인이겠지만 그 밖에 다음의 요인을 들 수 있다.

이번 直交易의 推進이 政治的 要因으로 인해 북한이 消極的 立場을 견지해 온 政府次元에서의 經濟交流協商이 아니라 民間次元에서 이루어진 점이다. 특히 北韓側 去來當事者인 금강산국제무역개발회사는 순수 北韓貿易商社가 아니라 在美僑胞와의 合營으로 外國投資家의 完全 私有를 허용하는 조건하에 이루어진 기업이라는 점에서 南韓企業과의 直接的인 交易相談을 꺼려온 북한무역상사보다 교섭이 용

10) 최근에는 間接交易 또한 상당부분이 사실상의 直交易形態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1990년까지만 하더라도 南北韓交易은 홍콩, 中國, 日本 등을 통한 仲介貿易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금년에 들어와서는 홍콩, 일본 등 해외에 支社를 둔 南韓企業의 現地法人을 통해 北韓 貿易商社와 직접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1991년 1월~7월간 搬出·入 承認된 159件 가운데 64件(40%) 정도가 이와 같은 直交易에 가까운 형태를 띠고 있다.

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11]. 또한 北韓의 搬入品目으로 남한 쌀이 채택된 것은 그동안 지속적인 쌀수출국으로 자처해 온 북한의 입장을 고려할 때 상당히 전향적인 변화로도 볼 수 있지만 남한 쌀의 搬入이 機械類, 自動車, 石油化學製品, 電氣·電子機器 등 南韓產 工產品의 搬入과는 달리 북한주민에게 南韓經濟의 實狀을 인식시켜 體制問題 등을 야기시킬 소지가 적었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북한은 1984년 水害物資 提供時 남한에 쌀 5萬석을 공여한 바 있다.

이번 直交易 成事가 주는 示唆點은 南北韓 直交易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政府 次元에서의 交易協定締結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아울러 現在 南北韓間의 政治的 要因을 감안한 民間商社 次元의 直交易推進과 民間團體 主導의 접촉 및 協商窓口 設置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는 것이 현실성 있는 南北韓 經濟交流 擴大方案이라는 것이다.

IV. 南北韓 經濟協力의 推進

南北韓 交易 및 經濟協力의 推進은 경제교류에 따른 直接的인 經濟的 利益도 중요하지만 남북한간 긴장을 완화시키고 지금부터 추진해 나가야 할 南北韓 單一經濟共同體의 形成에도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이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 南北韓間 정상적인 協力體系가 이루어질 경우 產業構造와 賦存資源의 측면에서 相互補完性이 커서 南北韓 모두에게 經濟的 實益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즉 生產要素의 측면에서 南韓이 資本과 技術에 優位性이 있는 반면, 北韓은 상대적으로 풍부한 天然資源과 勞動力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므로 南北韓의 經濟協力은 兩者에게 經濟的 實益을 보장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經濟協力을 통한 南北韓 經濟共同體의 形成은 市場規模의 擴大에 따른 規模의 經濟效果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南北韓 공히 軍事費의 減縮에 따른 投資擴大效果와 賦存資源 및 人力의 공동이용에 따른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어 南北韓 經濟의 效率性이 크게 높아지고 國民所得이 增大됨으로써 東北亞에 있어서의 강력한 經濟單位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南北韓 交流協力事業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부분에 있어서 南北韓 當局의 合意와 支援下에 추진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최근 北韓經濟가 처한 대내외적 어려움이 北韓으로 하여금 南北韓 經濟交流 推進에 나서게 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사실이지만 經濟外的인 側面에서 보면 지난 40여년간 적대관계를 유지해 오면서 體制的 優位性을 주장해 온 北韓이 북한주민들에게 南韓經濟의 우위성을 인식시킬 우려가 있는 南北韓 經濟交流에 선뜻 응할 가능성이 낮은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初期段階의 經濟協力은 분쟁의 요소가 적고 또한 南北韓間 關係改善의 波及效果

11) 재미교포와 북한간에 外國投資家의 完全 私有를 허용하는 조건으로 설립된 合營會社는 1989년 설립된 고려상업은행, 금강산국제무역개발회사, 금강산국제관광회사 등 3개사이다. 洪性國(1990), pp.38~40 참조.

가 큰 분야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고 쌍방의 수용이 가능한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하여, 현행 間接貿易形態에서 直接貿易形態로 발전시키고 제3국으로의 共同進出, 南北韓 經濟協力側面에서의 間接·直接投資로의 段階別 接近이 필요하며 연쇄효과(linkage effect)의 극대화를 위해 多段階 同時推進의 柔軟性도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南北韓 經濟交流의 基本目標는 民族經濟共同體를 형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므로 점차 活性化가 예상되는 南北韓의 經濟交流·協力의 推進은 交易段階, 資本·技術 協力段階뿐만 아니라 民族經濟共同體 形成 이후 南北韓 產業構造調整段階 등 전체의 흐름을 염두에 두고 반드시 長期的인 視角에서 一貫性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1. 南北韓 經濟交流의 基本方向

南北韓間에 이루어질 수 있는 經濟交流 및 協力의 종류는 크게 네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直·間接交易은 經濟交流의 가장 基本的인 段階이며 實現이 용이하고 확대·발전의 가능성 또한 높은 분야이다. 둘째, 南北韓의 양지역이나 제3국에 대한 共同投資, 技術交流, 資源共同開發 등과 같은 직접적인 生產活動部門에서 南北韓間의 經濟協力이 이루어질 수 있다. 셋째, 交通·通信·金融 등과 같이 商品去來 혹은 投資交流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下部構造의 共同構築이 가능하다. 넷째, 民間 혹은 政府次元에서 이루어지는 現金 및 現物의 供與, 혹은 北韓의 經濟發展을 촉진하기 위한 間接的인 支援 등을 들 수 있다.

현재 南北韓 經濟交流는 이질적인 政治·社會·經濟體制下에서 지나치게 政治的 影響에 민감함으로써 단기적으로 본격적인 經濟交流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제한적인 商品交易 및 相互間의 經濟的 利益이 크고 政治·社會的 波及效果가 작은 부문의 經濟協力 推進은 가능하리라고 본다. 현재 民間商社間의 南北韓 直交易이 성사된 점을 감안하면, 民間主導로 南北韓이 需給上 隘路를 느끼는 品目의 相互交易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또한 南北韓 經濟協力事業은 기본적으로 南北韓間에 人的·物的交流가 충분히 이루어짐으로써 相互 信賴回復과 交流의 慣例가 정착된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이지만 南北韓間 기존에 合意基盤이 형성되어 있거나 北韓體制에 미치는 波及效果가 작은 다음의 사업들은 그 실현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첫째, 既存協議對象으로 南北韓 經濟會談 당시 제의되어 기본적인 의견일치를 본 共同漁撈區域의 설정 및 大陸棚 地下資源의 공동개발, 금강산지역 觀光資源의 개발, 南北韓 自然生態系의 共同調査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第3國에 대한 南北韓 共同進出方案으로서 특히 북한과 인접한 蘇聯과 中國에서의 南北韓, 蘇聯, 中國의 合作事業 推進은 그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東北亞經濟圈 構想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셋째, 북한의 開發支援 및 外國投資 誘致에 참여하고 있는 UNDP(국제연합개발계획) 또는 UNIDO(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 등을 통해 북한과의 合作投資를 모색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특히 최근 북한은 UNDP의 支援으로 經濟特區의 일종이라 할 수 있는 「先

鋒地域經濟貿易地區開發構想」을 발표, 함경북도 先鋒(舊 雄基), 淸津, 羅津 일대를 대규모 中繼貿易基地로 건설할 예정인데 UNDP를 통한 開發參與 및 民間企業次元에서 이 지역에의 진출은 實現 可能性이 높다 하겠다.

그러나 본격적인 南北韓 經濟交流 및 協力의 擴大는 南北韓 當局間의 合意가 없는 상태에서는 한계가 있다. 즉, 南北韓 經濟交流는 남북한의 상이한 體制로 인하여 기본적으로 양측 정부의 관리하에서만 가능하므로 경제교류의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經濟協定의 締結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즉, 南北韓間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交流와 協力이 실현되려면 우선 무엇보다도 相互 人的·物的 往來와 通信이 원활히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南北韓間 通行·通信·經濟交流協力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되어야 하며 다각적인 南北間 經濟交流 및 協力에 관한 諸般事項들을 협의하기 위해서 南北 經濟會談 당시 제의되었던 「南北經濟協力 共同委員會」의 구성 등이 필요하다.

한편 南北韓 經濟協力의 활발한 진전을 위해서는 北韓의 資本不足問題의 解消에 기여할 수 있는 우회적인 金融支援方法에 대한 검토 또한 필요하다. 남북한 UN동시가입을 계기로 북한은 IMF나 IBRD 그리고 ADB(아시아개발은행) 등과 같은 國際金融機構 加入을 서두를 것으로 보여 이들 기구를 통한 間接支援方式은 자연스러운 南北韓間 經濟協力方式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交易擴大方案

物資交流는 交流·協力의 段階 중 가장 기본적인 단계이며 實現이 용이하고 擴大發展可能性이 가장 높은 分野이다. 따라서 南北韓間에도 他分野의 交流·協力과 병행, 우선 物資交流를 추진하여 서로 필요로 하는 物資를 반입하고 供給餘力이 있는 物資를 반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南北韓間의 商品交易은 賦存資源의 差異 및 經濟發展段階의 差異에 따른 產業部門別 相互補完性과 價格의 差異 등으로 단기적인 觀點에서도 상호 이익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가. 直交易의 定着

南北韓 體制의 상이함에서 오는 基本的인 物資交流의 制約과 現在 第3國을 통한 交易方式의 諸般 問題點을 극복하고 南北韓 物資交流를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間接交易方式을 直交易方式으로 전환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데, 이를 위한 基本的인 前提條件으로서 南北韓 當局間에 交易에 관한 基本協定이 체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交易量, 交易價格, 去來方式 등에 관한 合意 및 輸送, 商品檢査, 紛爭處理 등 直交易實施에 따라 제기되는 제반문제에 대한 사전준비가 필요한데, 南北 經濟會談 당시 價格決定, 決濟通貨, 輸送手段 및 諸般 交易規定에 대해서는 合意에 이르렀고 交易量, 去來當事者, 關稅免除 등은 意見接近을 보았으며, 토의되지 못한 去來方式 또한 쌍방이 淸算計定方式을 基本으로 할 것을 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南北韓이 현재 政治的인 要因으로 인해 政府次元의 交易協定 締結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民間團體 主導의 接觸 및 協商窓口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民間次元의 經濟交流는 政治的 名分을 앞세우

는 政府次元의 會談이 갖는 취약점이 없고 北韓이 當面하고 있는 經濟的 隘路의 打開方案을 논의하고 협력할 수 있는 실질적인 通路의 역할을 할 수도 있어 北韓이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南北韓間 최초의 直交易 合意를 본 것 또한 民間商社間의 契約이었고 北韓側 去來當事者가 비교적 意思決定이 자유로운 在美同胞와의 合營貿易會社였던 점을 감안하여 北韓의 在美, 혹은 朝總聯系 合營貿易會社와의 交易相談을 활성화하는 한편, 나아가 烽火貿易總商社, 大聖貿易商社 등 北韓貿易商社들과의 직접적인 접촉 또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현재 直交易이 民間次元에서 시작되고 있는 初期段階임을 감안하여 당분간 南北韓交易形態는 物物交換方式, 또는 對應購買方式 등이 적절할 것으로 여겨지며 交易이 擴大됨에 따라 南北韓間 淸算支拂協定을 체결하여 淸算去來方式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南北 經濟會談 당시 去來方式은 구체적으로 토의되지는 못했지만 쌍방이 淸算決濟方式을 기본으로 할 것을 제의한 바 있다. 淸算協定이 체결되기 전에는 第3國銀行 發行의 信用狀을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지만 북한의 外換不足問題를 고려할 때 交易擴大의 制約要因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南北韓間 淸算支拂協定이 체결되면 남한의 중앙은행과 북한의 중앙은행내에 淸算計定을 설치하여 일정기간(6개월~1년이내) 경과후 相互 交易의 差額을 결제하는 方法을 택하되, 淸算協定에 의한 去來方式이 貿易去來를 축소균형화할 우려가 있으므로 일정기간 交易이 진행된 후에는 相互 金融協定을 통해 信用供與(swing)制度를 도입, 일정한 한도내에서 자동대출을 인정하는 無利子 借越制度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北韓의 外換事情을 고려, 소련의 경우처럼 북한에 技術 및 設備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생산된 製品을 수입하는 製品再購買去來方式(product buy-back) 또한 고려할 여지가 있다.

나. 搬出·入 品目의 選定

南北韓 經濟交流의 推進에 있어서 가장 손쉬운 것은 南韓의 既存 輸入先을 北韓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南北韓 經濟交流의 새로운 출발이라는 의의뿐만 아니라 北韓이 가장 우려하는 開放의 波及效果(특히 韓國의 경제현실에 대한 北韓住民들의 인식으로 인한)를 최소화하면서 北韓의 輸出擴大努力을 지원하는 효과도 있다. 또한 南韓의 해당기업들은 輸送費 節減, 關稅免除, 北韓商品의 낮은 價格 등에 의한 經濟的 實利를 얻을 수 있는 측면도 많다[12].

搬入商品의 選定은 商品의 質的 問題 등을 고려하여—일본을 포함한 OECD에 대한 輸出品目은 北韓이 國際競爭力을 지닌 商品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南韓의 輸入品目 중에서 北韓의 OECD에 대한 輸出品目과 일치하는 품목을 일차적으로 선정하고[13] 北韓의 최대 貿易相對國이었던 蘇聯에 대한 輸出品目을 고

12) 南韓은 연간 30億달러 상당의 鑛物資源(석유제외)을 수입하고 있는데 이 중 北韓의 主要生産物인 鐵鑛石, 有煙炭, 망간, 마그네사이트 등 4개 항목의 輸入額이 17億달러에 달한다. 長期契約 締結 등 鑛物輸入의 特性을 감안하더라도 이 중 일부는 北韓으로의 輸入先 轉換이 가능할 것이다.

13) 1987년을 對象으로 한 구체적인 品目選定은 産業硏究院(1989), pp. 149~151 참조.

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지금까지 間接交易 方式으로 搬入해 온 北韓商品의 品質 및 經濟性을 바탕으로 南北韓 既存 去來品目의 擴大方案도 필요하다. 또한 北韓의 主要 輸出品目 중에서 分類上 南韓의 輸出品目과 일치하는 품목일지라도 品質 및 價格 등의 差異로 반입 가능한 품목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며 기후 등의 영향으로 生産量이 크게 변동할 수 있는 農産物의 경우는 國內産業의 피해가 없는 범위에서 그때그때 搬入, 搬出이 가능할 것이다[14].

한편 北韓으로의 搬出商品 選定은 최근 北韓輸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北韓의 對蘇聯 輸入商品과 經濟體制로 인한 南北韓間 技術上의 問題를 고려하여 北韓의 對OECD 輸入商品 중에서 南韓의 輸出商品과 일치하는 品目이 객관적인 선정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北韓으로의 商品搬出 與否는 전적으로 北韓이 南韓商品을 반입할 의사가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즉 北韓은 南韓으로부터의 商品搬入이 經濟的으로 利益이 되더라도 南韓商品 搬入이 北韓體制에 미칠 수 있는 否定的 波及效果 및 經濟的인 從屬을 가져올지도 모른다는 우려 등으로 南韓商品 搬入의 선택폭이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15].

北韓의 主要 輸入品目은 ① 原油 및 石油製品, 코크스 및 코크스용 석탄 등 에너지 關聯製品, ② 機械 및 設備, 電氣·電子機器, 輸送機器 등 先進技術 및 資本設備製品, ③ 纖維類, 穀物, 鐵鋼製品 등의 輸入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서 農水産物, 鐵鋼 등 材料別 製造製品, 최근 被服工業을 포함한 纖維工業部門 育成에 따른 纖維 및 織物類, 그리고 社會主義國家 全體의 不足商品인 生活日用品 등의 搬出은 北韓이 經濟會談 當時 搬入希望品目으로 제시한 바도 있어 搬出이 가장 용이할 것이다[16]. 최근 북한은 輕工業發展政策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衣類工業의 강조로 纖維 및 織物輸入이 급격한 증가추세에 있다. 1989년 소련으로부터의 縫製工業用 原資材 輸入은 1988년과 마찬가지로 2億달러 상당에 달하고 있고 綿織物 및 毛織物의 輸入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일본, 홍콩, 프랑스 등으로부터의 合成纖維 및 織物輸入이 증가하고 있다. 業界에서는 北韓의 外換事情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交易이 확대된다 해도 衣類 등 最終製品의 搬出은 거의 불가능하리라고 전망하고 있기도 하나 韓國産 織物이나 原絲 등 中間素材製品이 지금도 일본이나 홍콩, 동구권 등을 통해 北韓으로 일부가 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搬出可能性이 큰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으로 機械類, 電氣·電子機器, 輸送機器 등 機械 및 運輸裝備는, 北韓의 입장에서 보면 垂直的 分業形態의 交易으로 여겨져 상호간의 信賴가 회복되지 않은 현단계에서는 搬入可能性이 낮다고도 볼 수 있지만, 北韓이 經濟沈滯를 탈피하기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南韓의 경우도 搬出有望品目이 많아

14) 需給上 隘路商品으로 남한의 경우 감자, 양파, 명태, 오징어, 조기 등 농수산물과 시멘트 등을 들 수 있다.

15) 北韓의 경우 南韓商品 搬入의 否定的 效果를 우려, 南韓으로부터의 搬入可能品目을 日本 및 南韓과 비슷한 經濟發展段階에 있는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 아시아新興工業國家에서 수입할 가능성이 높다.

16) 南北 經濟會談 당시 北韓側의 搬入希望商品으로는 鐵鋼材, 重石鑛, 나프타, 纖維 등 工業製品과 南海魚族, 소금, 감귤 등을 들 수 있다.

상호간의 交易의 利益이 클 것이므로 直交易 方法의 강구 외에도 해외동포, 혹은 제3국을 통한 間接交易 등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할 것이다. 機械類의 경우 北韓이 生活用品部門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生活用品을 만드는 產業機械의 반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北韓과 경제사정이 비슷한 中國이 최근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려고 하는 纖維機械, 플라스틱加工機, 食品加工機械, 포장 및 化學用機械, 범용공작기계 등이 반출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石油, 石炭, 코크스 등 에너지關聯製品은 南北韓 공히 輸入에 의존하는 정도가 큰 品目들로 南北韓間의 交易品目은 아니지만 최근 소련으로부터의 원유도입이 크게 감소하는 등 外貨不足으로 에너지부문이 北韓產業發展의 가장 큰 隘路要因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南韓의 原油輸入→北韓으로의 再搬出, 혹은 國際金融機構 등을 통한 資金의 間接支援方式 등도 검토해 볼 여지는 있을 것이다.

3. 合作投資의 推進方案

가. 基本視角

일반적으로 共同投資나 技術移轉 등과 같은 經濟協力은 直接交易이 충분히 이루어짐으로써 상호간의 신뢰와 경제거래 관행이 어느 정도 정착된 단계에서 진전될 수 있는 것으로 南北韓 經濟交流 또한 東西獨 등 일반적인 異質體制間의 經濟交流關係와 같이 間接交易→直交易→經濟合作의 順序를 밟는 것이 용이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北韓은 1984년 合營法 發表 이후 償還負擔이 없는 合作投資의 推進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고 南北韓 經濟交流에 있어서도 經濟合作과 物資交流의 同時推進을 주장한 바 있으며, 南韓의 경우도 현재 對內的으로 製造業 등의 經營環境이 악화됨에 따라 많은 企業들이 海外投資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南北韓 合作投資에 대한 相互 協力可能性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재 西方國家의 對北韓 合作投資가 北韓의 對外信用 및 採算性問題 그리고 合營企業을 보호할 수 있는 法的·制度的 裝置의 미비로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日·北韓 關係正常化가 이루어질 경우 合作投資 또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北韓이 최근 심각한 經濟難을 타개하기 위해 함경북도 淸津, 雄基, 羅津, 새별 일대의 經濟特區化 計劃을 가시화함에 따라 政府次元에서의 南北韓 經濟協力方案의 논의와 아울러 북한의 수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在美, 在中, 在日 등 海外僑胞 및 國內企業의 海外支社 등을 통한 對北韓 經濟協力方案의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실질적인 經濟協力을 위해서는 남북한 경제의 잠재력을 평가하여 雙方의 受容이 용이하고 共同의 利益이 존재하는 領域부터 協力의 토대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南北韓經濟協力은 初期段階에서는 北韓經濟의 취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部門에서 우선적으로 支援·協力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經濟協力이 본격화되는 段階에서는 南北韓 產業構造 改編의 必要性을 염두에 두고 南北韓의 產業이 相互補完的인 構造로 발전할 수 있도록 協力의 方向이 수정돼야 할 것이다.

나. 北韓의 合營希望分野

對北韓 合作投資 등 經濟協力의 分野選定은 南韓의 投資可能分野를 위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合作投資 誘致의 決定權은 북한에 있으므로 북한의 合營希望分野를 대상으로 合作投資의 妥當性을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이라 할 수 있다.

北韓이 合作投資 誘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이유는 蘇聯, 東歐, 中國 등 다른 社會主義國家들과 마찬가지로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商品을 생산하기 위하여 先進技術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고 現代的인 經濟管理·運營의 經驗을 배우며 國內 資本不足을 보전하기 위함이다. 즉 北韓의 合作投資 誘致는 先進工業과 技術의 導入, 輸出完製品 基地의 創設, 그리고 북한의 풍부한 自然資源의 合理的 利用·開發을 목표로 한다고 할 수 있다. 北韓의 合營法은 "합영대상으로 工業, 建設, 運輸, 科學技術, 觀光業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할 수 있다"고 하여 合作希望分野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17].

1989년 北韓 合營工業部(현재 대외경제사업부 합영공업총국) 발표에 따르면 合作投資가 실현 또는 추진중인 것이 100여건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18].

그 가운데 日本 朝總聯과의 合營이 전체의 70%, 蘇聯, 中國 등 社會主義國家 20%, 開發途上國 및 西方先進國과의 合營이 10%인데 개발도상국 및 서방 선진국가에는 홍콩, 태국, 오스트레일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이 포함된다. 業種別로는 輕工業, 農林水産業, 商店 및 식당 등이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重工業과 기타(금융, 수송, 의료 등)가 20%라고 밝히고 있다.

다. 合作投資의 推進

南北韓 合營對象部門의 選定은 현재 북한 合作投資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日本 朝總聯과의 合營現況과 최근 北韓이 外國投資를 유치할 목적으로 國際聯合工業開發機構(UNIDO)와 협력하여 선정한 프로젝트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일본 조총련과의 合作投資는 북한이 해외동포의 資本誘致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南北韓의 經濟的 與件의 차이를 감안할 때 북한의 소련 등 社會主義國家와의 合作投資보다 시사하는 바가 크다. 조총련과의 합영현황을 살펴보면(附表 3 참조), 1989년말 현재 總合營件數는 98件(1986년 4건, 1987년 26건, 1988년 34건, 1989년 34건)에 이르고, 그 중 41件이 조업중이다[19]. 業種別로는 봉밀(벌꿀)·섬게·뱀장어 등 1차산업이 8건, 제조업·건설·광업·전기사업·운수업 등 2차산업이 44건, 상업·금융·서비스업 등 3차산업이 21건이며, 合營 總投資額은 약 113億엔, 1건당 平均投資額은 1.6億엔이다.

현재 朝總聯과의 合作投資는 農水産物, 商店 및 食堂, 그리고 2次産業 중에서 纖維 및 衣類産業을 중심으로 한 輕工業部門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北韓이 사실상 合作을 원하고 있는 石炭, 非鐵金屬 등 鑛業과 重化學工業 및 尖端産業部門에의 合作投資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이들 부문에 대한 北韓

17) 北韓의 合營法 및 그 施行細則은 大陸硏究所(1990), pp.219~227 참조.
18) 日本貿易振興會(1990), p.28 참조.
19) 구체적인 內容은 朴三石(1990) 참조.

의 投資與件 未備 및 經濟性 保障與否가 根本的인 問題이겠지만 朝總聯系 企業들이 대규모의 資本을 필요로 하는 이들 부문에 대한 合作投資를 감당할 수 있는 經濟的 能力이 없는 점 또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했으리라 여겨진다. 반면 生絲, 洋服 등 纖維 및 衣類產業部門의 合作은 활기를 띠고 있는데 주로 對日本 輸出을 目的으로 하고 있다. 이들 合營投資는 아직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規模와 業種面에서 北韓經濟를 부상시킬 정도의 영향력은 없지만 질적·양적으로 서서히 확대되고 있으며 經濟效率의 槪念을 이전하는 교육적 효과를 주고 있다는 것이 주목된다.

또한 南北韓 合營對象의 選定은 北韓이 資本·設備의 導入 및 合作投資를 유치할 목적으로 國際聯合工業開發機構(UNIDO)와 협력하여 선정한 프로젝트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20]. 北韓은 이들 部門의 開發을 위해 合作投資, 借款 및 設備導入, 特許, 生產品의 輸出許容 등 다양한 投資誘致方案을 강구하고 있다.

UNIDO 프로젝트를 분석하면(附表 4 참조), 북한이 經濟發展 段階上 美國, 日本 등 先進國의 國際競爭力이 높은 分野인 尖端產業分野보다는 많은 부문에 있어서 韓國 등 新興工業國들의 국제경쟁력이 높은 분야들의 合作投資 誘致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프로젝트를 제외하고는 대규모의 投資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 南北韓 合作投資가 시작될 경우 織物 및 衣類, 食品 및 農水產加工業, 窯業工業部門뿐만 아니라 南韓의 對外競爭力이 높은 電氣·電子部門, 化學·造船部門, 그리고 鑛業, 機械工業의 일부 등 北韓 合營希望部門의 대부분에 대해 合作投資가 가능하리라 여겨진다.

따라서 南北韓 經濟協力의 推進은 이러한 北韓의 合營希望部門 중에서 南北韓 體制上의 差異로 인한 制約要因을 고려하여 우선 共同漁撈 및 水產物加工合作 등 북한이 우려하는 남북한 합영에 따른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은 부문, 北韓이 최근 輸出增大를 위해 역점을 두고 있는 纖維, 衣類部門과 生活用品, 食料 등 輕工業部門의 經濟協力부터 시작하는 것이 實現可能性이 클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으로 北韓이 開發必要性을 크게 느끼고 있어 經濟會談 당시 제안했을 뿐만 아니라 共同開發·利用으로 南北韓 共同利益을 도모할 수 있는 무연탄, 철광석, 비철금속 등의 地下資源 開發部門이 유망하며, 북한경제의 가장 큰 애로요인인 에너지문제의 해결을 위한 북한으로의 電力供給 또한 技術·費用的 側面에서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 여겨진다. 중·장기적으로는 南韓이 어느 정도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電氣·電子部門, 自動車, 造船部門의 合作投資 또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V. 結　　言

韓半島를 둘러싼 周邊國의 對韓半島 政策變化는 1990년대에 새로운 東北亞經濟圈을 형성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며 동시에 南北韓 關係改善을 촉진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國際情勢變化, 심각한 經濟難, 體制內的 矛盾의 증대 등 北韓이 처해 있는 對內外的 狀況은 北韓의 開放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

20) UNIDO(1990) 참조.

北韓은 南北韓 UN加入을 계기로 침체된 북한경제의 회복을 위해 國際機構를 통한 對西方 經濟協力을 적극 추구할 것으로 예상되며 南韓의 경우도 勞動力不足, 賃金上昇, 地價上昇 등으로 企業의 經營環境이 악화됨에 따라 현재 많은 기업들이 海外投資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南北韓 經濟協力의 可能性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短期的으로는 北韓의 體制維持를 위한 消極的 姿勢로 南北韓 交流는 交易·文化·體育·藝術 등 一部分野 중심의 制限的 交流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中長期的으로는 脫共產化, 聯邦解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蘇聯의 開放·改革의 急進展 可能性과 中國의 지속적인 經濟改革의 推進 등으로 北韓의 對外開放 擴大 및 對蘇戰略 修正에 따라 南北韓 交流 및 協力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나 北韓이라는 극도로 통제된 사회가 개방되어 住民들이 자신의 絶對·相對的 貧困과 生活水準 隔差를 인식하게 된다면 東歐와 같이 체제붕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분간 北韓當局은 중국과 같이 經濟部門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점진적인 改革·開放을 모색할 것이다.

南北韓 經濟協力의 活性化는 北韓의 중앙집권적인 計劃經濟의 속성상 事前에 충분히 예정된 輸出入品目 이외에는 輸出·入 餘力이 없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나 產業構造上 相互補完性이 커서 展望은 밝은 편이다.

앞으로 南北韓間에 정치환경 등 여건만 개선된다면 南北韓이 供給餘力이 있는 物資를 중심으로 直交易 可能性이 크며, 특히 南韓의 立場에서 生產不足으로 國內價格이 높게 형성되는 1次商品의 對北韓 搬入이 증가할 것이다. 또한 通商·通信·通行 등 3通協定에 관한 一般協定 締結 등 經濟交流를 위한 制度的 裝置가 마련될 경우 北韓의 經濟開發에 南北韓 交易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直交易이 성립되더라도 북한의 어려운 외환사정을 감안할 때, 南韓物資의 北韓으로의 搬出보다는 北韓物資의 南韓搬入이 절대량을 차지할 것이므로 양측 決濟는 남한에서는 달러 등 硬貨決濟로, 北韓에서는 物物交換의 형태가 과도기적 수단으로 적절할 것이다.

아직 技術·資本 및 마케팅 등의 열세로 對外輸出을 크게 기대하기 힘든 북한이 外貨不足問題를 쉽게 풀 수 있는 분야의 하나는 풍부한 觀光資源의 開發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南北韓 UN同時加入을 계기로 南北韓 共同觀光開發事業을 적극 推進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北韓이 豆滿江 流域에 추진하고 있는 經濟特區(북한표현 : 經濟貿易地區) 또한 南北韓 經協을 본격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UN이라는 국제기구를 제대로 활용한 적극적인 참여로 南北韓 經濟交流의 폭을 넓혀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豆滿江 流域의 經濟特區 開發構想은 周邊國間의 상호 미묘한 競合關係로 政治·經濟的 戰略과도 연계되어 있어 그야말로 정교한 상황판단이 요구되므로 우리는 統一韓國이라는 비전을 놓고 南北韓 經濟協力과 東北亞地域 經濟協力이라는 兩構圖를 조화시켜 나가는 冷靜性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南北韓 總理의 서울·평양 交叉會談은 南北韓 關係改善의 새로운 출발이라는 觀點에서 向後 南北韓交流를 政府次元에서 本格化하는 중요한 契機가 될 것이므로 經濟協力을 위한 實質的 討議를 할 수 있는 與件造成

및 최소한 交流協力에 관한 原則的 合意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南北韓高位級 4次會談(1991.10.24~25)에서는「南北韓 사이의 和解와 不可侵 및 交流協力에 관한 合意書」에 대하여 序論, 南北和解, 南北不可侵, 南北交流協力 修正 및 發効 條項 등에 관한 形式과 名稱構成 등에 合意하였는데 이는 南北韓 關係改善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다분히 政治宣傳場的 性格을 띠었던 南北高位級會談이 南北韓間의 여러 懸案들을 실질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協商의 자리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고 하겠다.

4次會談에서 南北은 상대방에 대한 破壞·征服行爲 禁止條項과 離散家族問題 解決을 合意書 內容에 포함시키고 國家保安法과 관련, 統一에 저해되는 法的·制度的 裝置除去라는 종래의 주장을 삭제하는 데 동의하였는데 이와 같은 北韓의 態度變化는 南北韓을 둘러싼 다음과 같은 與件變化에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우선 南北對話의 최대 장애물의 하나였던 UN加入問題가 南北韓 同時加入이란 형태로 타결되었고 美國 및 蘇聯의 획기적인 核減縮宣言의 影響 및 蘇聯의 불발쿠데타 이후 공산당의 급격한 몰락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北韓은 당면한 經濟難의 타개를 위해 開放과 南北韓 經濟交流擴大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고 신축적인 南北關係를 유지함으로써 北韓-日 修交와 北韓-美 關係改善의 유리한 여건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南北韓이 合意書의 形式 등에 합의했다고 해서 단기간에 南北韓關係의 획기적인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南北韓問題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예로서 양측이 논의할 合意書 內容에는 意見差異가 많아 상당한 진통과 절충이 예상되는데 北韓의 주장에는 南韓이 채택을 요구하는 실효성 있는 不可侵宣言을 위한 保障裝置, 3通 등 經濟交流協力을 위한 具體的 實踐措置, 신문, 라디오, TV, 출판물 開放措置 등이 들어 있지 않으며 南韓의 常駐代表部 交換設置에 대해서도 北韓은 긍정적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전반적으로 南韓의 주장이 具體的이고 實踐的 性格인 데 반하여 北韓의 주장은 宣言的이며 包括的인 側面이 많은데 이는 북한이 周邊國과의 關係改善을 위해 남북한 관계를 戰略的 次元에서 이용하는 측면이 강함을 나타낸다.

현실적으로 南北韓 經濟協力의 進展은 北韓의 變化와 南韓의 신축적인 對應與否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따라서 北韓의 開放·改革에 의해 北韓經濟가 회복되고, 南韓은 이에 대응하여 점진적으로 對北韓 經濟協力을 증진시키면서 南北韓 單一經濟共同體를 지향하는 段階的인 接近方法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漸進的인 經濟共同體 形成을 위한 南北韓 經濟協力段階는 信賴構築段階, 協力增進段階, 同質性回復段階로 나눌 수 있는데, 첫번째 단계로서 信賴構築段階에서는 상호신뢰를 회복하고 북한의 開放·改革을 촉진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 南北韓 交易을 확대하고 본격적인 經濟協力推進을 위한 與件造成으로 通商·通行·通信의「3通協定」締結 및 南北韓 經濟協力을 위한 諸般 制度整備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協力增進段階에서는 直·間接投資 등 南北韓 共同事業을 확대하여 상호 依存度를 높여 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구체적인 協力方案으로는 觀光 및 地下資源의 共同開發,

輕工業 등 勞動集約的 產業의 北韓移轉 推進, 非武裝地域內 自由交易地帶設置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를 위해 投資保障協定 및 科學技術協力協定 등이 체결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同質性回復段階에서는 南北韓의 經濟·社會的 同質性의 회복을 위해 상호 市場을 개방하고 生產要素의 自由移動을 보장하며 生活隔差를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方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즉, 勞動關係, 雇傭制度, 敎育制度 등 經濟·社會制度를 정비하고 南北韓 經濟의 均衡發展을 위한 產業構造의 調整 및 經濟開發計劃의 共同推進 등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 參 考 文 獻 ◁

근로자사, 『근로자』, 평양, 各號.

大陸硏究所, 『北韓法令集(第3卷)』, 서울, 1990. 8.

產業硏究院, 『南北韓 經濟交流促進을 위한 中長期 發展計劃(案)』, 1989. 4.

延河淸, 『北韓의 經濟政策과 運用』, 硏究叢書 57, 韓國開發硏究院, 1986.

_____, 『東北亞 經濟環境變化와 南北韓 經濟協力』, 政策硏究資料 91-09, 韓國開發硏究院, 1991. 3.

延河淸·金炯元, 『北韓의 經濟計劃』, 政策硏究資料 90-06, 韓國開發硏究院, 1990. 2.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연감』, 평양, 각년도.

統一院, 「北韓經濟의 綜合評價」, 1991.

_____, 「南北交流協力動向」, 第1, 2號, 1991. 7, 1991. 8.

韓國貿易協會, 「南北交易實態調査」, 1990. 11.

한수길,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 것은 현시기 경제건설에 나서는 절실한 요구」, 『근로자』, 평양, 1991. 4, pp. 68~71.

洪性國, 「北韓의 經濟開放現況과 그 展望」, 『共產圈硏究』, 極東問題硏究所, 1990. 5, pp. 36~45.

朴三石, 「在日朝鮮人による合營事業の現狀と課題(上), (下)」, 『朝鮮資料』, 朝鮮問題硏究所, 東京, 1990. 5, pp. 45~54 및 1990. 6, pp. 63~70.

日本貿易振興會, 『北朝鮮の經濟と貿易の展望』, 1990.

Asian Development Bank, *Key Indicators of Developing Asian and Pacific Countries,* Vol. XXII, July 1991.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EIU), *Country Profile, China, North Korea, 1990~91,* London, 1991.

_____, *Country Report, China, North Korea,* No.2, London, 1991.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Investment Promotion Service, *List of Project Profile from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1990. 7.

〈附表 1〉 北韓 物資搬入 承認現況
(1988.10～1991.8)

(단위 : 千달러)

	1988～90	1991 (1～8月)	計
動物性生產品[1]	2,670	22,242	24,912
植物性生產品[2]	4,652	12,440	17,092
鑛物性生產品[3]	7,542	11,956	19,498
卑金屬 및 그 製品[4]	22,494	49,809	72,303
貴金屬[5]	—	9,935	9,935
기 타[6]	4,146	5,902	10,048
計	41,504	112,284	153,788

註 : 1) 냉동홍어, 냉동조기, 냉동명태, 건오징어 등.
2) 감자, 한약재, 낙화생, 팥, 송이버섯 등.
3) 무연탄, 시멘트, 장석 등.
4) 아연괴, 연괴, 전기동, 빌릿, 열연코일, 선철, 봉강 등.
5) 금괴, 은괴 등.
6) 생사, 원목, 공예품 등.

資料 : 統一院, 『南北交流協力動向』, 第1, 2號, 1991.7, 1991.8을 참고하여 작성.

〈附表 2〉 對北韓 物資搬出 承認現況(1988.10～1991.8)

	主要品目	單 位	數 量	金額(千달러)
1989	잠 바	벌	5,000	69
1990	설 탕	MT	17	10
	담 배 필 터	개	3,000만	83
	양 말 편 직 기	대	150	2,188
	테 트 론 솜	MT	2,000	2,450
	소 계			4,731
1991	H. D. P. E (고밀도폴리에틸렌)	MT	5,000	6,250
	쌀	″	5,000	1,750
	비 닐 박 막	m^2	1,350만	1,283
	직 물 류	M	56만	1,180
	고 유 황 디 젤 유	B/L	30,000	845
	세 탁 비 누	MT	2,000	760
	컬 러 T V	대	1,000	240
	냉 장 고	″	400	200
	종 이	MT	83	62
	소 계			12,570
	總 計			17,370

資料 : 〈附表 1〉과 同一.

〈附表 3〉 操業中인 朝總聯과의 合營企業(1989년말)

	業 種	生 産 內 容	企業數
1次産業	農 · 水 産 物	밤, 봉밀, 짚가공, 약초류, 수산물, 양식업(뱀장어)	6
2次産業	輕 工 業	생사, 견직물, 편직물, 양복을 포함한 남성·여성의류, 오리털가공, 피아노, 인삼크림 등	13
	電氣·電子機械類	전기·전자제품, TV 및 타이프라이터 부속품, 소형변압기, 건설기계(불도저, 크레인 등) 수리, 엔진재생	6
	化 學 工 業	타이어 생산	1
	其 他 機 器	의료기기(심전계 등)	1
	鑛 業	장석	1
3次産業	商 業	상점 및 식당	7
	金 融 · 貿 易	은행업, 금융업, 무역업	3
	運 輸	관광운수, 냉동화물선	2
	其 他	골프장	1
計			41개사

資料：朴三石,「在日朝鮮人による合營事業の現狀と課題」,『朝鮮資料』, 朝鮮問題研究所, 東京, 1990.5, p.52.

〈附表 4〉 北韓의 海外投資誘致 希望 프로젝트(1989년말)

(단위 : 百萬달러, 件數)

部 門	投 資 對 象	投資規模		프로젝트數
		總 投 資	海外投資	
1. 광 업	銅, 흑연, 대리석, 화강암 등	67.1	46.3	5
2. 식품 및 농수산업	건강식품, 수산물가공, 콩기름, 과일쥬스 등	32.9	17.1	4
3. 직물 및 의류	견직물, 실크니트웨어, 견양말, 면, 신발, 의류, 나일론, 스프, 테트론섬유, 인조견사 등 합성섬유	293.9	217.2	7
4. 목재 및 목재가공	합판	3.0	2.5	1
5. 화학제품	페라이트, 향수, 精油, 구연산, 염화비닐, 스티렌, 에틸벤젠, 가성소다, 알데히드 수지, 무수프탈산 등	276.6	139.9	11
6. 유리 및 요업품	고령토, 규조토, 점토, 편암토, 벤토나이트, 유리받침, 유리섬유, 크리스탈 등	55.6	30.4	7
7. 금속산업	아연, 카드뮴, 티타늄, 크롬강, 마그네샤클링카, 전기동, 희토류, 마그네슘 등	156.2	97.4	12
8. 조립금속품	볼트, 너트	0.8	0.3	1
9. 기계공업	공작기계, 유압기, 연삭기, 절삭기, 산업용재봉틀, 전해장치, 유압펌프 및 밸브, 연료펌프 및 분사기 등	192.1	95.2	8
10. 전기·전자 공업	배터리, 흑백TV, 전기기구, 전기모터, 컬러TV, 희토류영구자석, 계전기, 변압기, 엘리베이터, 소형컴퓨터, 계산기, 녹음기, 냉장고, 양극성집적회로	334.2	165.1	25
11. 조 선	어선건조 및 각종 선박수리	148.9	75.6	2
計		1,561.3	887.0	83

資料 :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Investment Promotion Service, *List of Project Profile from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1990. 7을 참고하여 작성.

研究叢書案內

1 韓國「인플레이션」의 原因과 그 影響
金光錫 著 18 切 判/ 122쪽 高級洋裝/3,000원

2 穀價政策의 計劃化～次善의 糧穀政策
文八龍 著 18 切 判/ 158쪽 高級洋裝/3,600원

3 韓國農業의 成長(1918～1971)
潘性紈 著 18 切 判/ 250쪽 高級洋裝/5,600원

4 韓國家計의 貯蓄行態
金光錫 著 18 切 判/ 146쪽 高級洋裝/3,000원

5 農產物價格分析論～理論과 政策
文八龍 柳炳瑞 共著 18 切 判/ 318쪽 高級洋裝/7,000원

6 *TRADE AND DEVELOPMENT IN KOREA*
洪元卓 A.O. Krueger 編 18 切 判/ 254쪽 高級洋裝/6,000원

7 *SOCIAL SECURITY IN KOREA*
朴宗淇 著 18 切 判/ 198쪽 高級洋裝/4,600원

8 *PUBLIC ENTERPRISE AND ECONOMIC DEVELOPMENT: THE KOREAN CASE*
L.P. Jones 著 18 切 判/ 294쪽 高級洋裝/6,600원

9 韓國의 外換·貿易政策
金光錫 L.E. Westphal 共著 18 切 判/ 336쪽 高級洋裝/7,600원

10 *FACTOR SUPPLY AND FACTOR INTENSITY OF TRADE IN KOREA*
洪元卓 著 18 切 判/ 236쪽 高級洋裝/5,000원

11 勞動供給과 失業構造
金秀坤 著 18 切 判/ 202쪽 高級洋裝/4,600원

12 韓國의 鐵鋼需要分析
宋熙秊 著 18 切 判/ 250쪽 高級洋裝/5,600원

13 韓國鐵鋼工業의 成長
金胤亨 著 18 切 判/ 508쪽 高級洋裝/11,000원

14 *PLANNING MODEL AND MACROECONOMIC POLICY ISSUES*
金迪敎 編 18 切 判/ 492쪽 高級洋裝/11,000원

15 *INDUSTRIAL AND SOCIAL DEVELOPMENT ISSUES*
金迪敎 編 18 切 判/ 342쪽 高級洋裝/7,600원

16 韓國의 人口問題와 對策
金善雄 編 18 切 判/ 532쪽 高級洋裝/11,600원

17 韓國電力需要 및 價格의 分析
張榮植 著 18 切 判/ 252쪽 高級洋裝/5,600원

18 市場構造와 獨寡占規制
李奎億 著 18 切 判/ 370쪽 高級洋裝/8,000원

19 賃金과 勞使關係
金秀坤 著 18 切 判/ 244쪽 高級洋裝/5,600원

20 韓國의 人口와 人口政策
洪思媛 著 18 切 判/ 214쪽 高級洋裝/4,600원

21 *TRADE, DISTORTIONS AND EMPLOYMENT GROWTH IN KOREA*
洪元卓 著 18 切 判/ 410쪽 高級洋裝/9,000원

22 成長과 構造轉換
金光錫 M. Roemer 共著 18 切 判/ 194쪽 高級洋裝/4,000원

23 韓國의 綜合輸送體系
林浩奎 著 18 切 判/ 306쪽 高級洋裝/7,000원

24 韓國企業의 財務行態
南相祐 著 18 切 判/ 204쪽 高級洋裝/4,600원

25 韓國經濟의 高度成長要因
金光錫 朴埈卿 共著 18 切 判/ 166쪽 高級洋裝/3,600원

26 *COMMUNITY DEVELOPMENT AND HUMAN REPRODUCTIVE BEHAVIOR*
洪思媛 著 18 切 判/ 198쪽 高級洋裝/4,600원

27 農業投資分析論
文八龍 林栽煥 共著 18 切 判/ 250쪽 高級洋裝/5,600원

28 纖維・電子工業의 特性과 需給構造
金榮奉 著 18 切 判/ 180쪽 高級洋裝/4,000원

29 鐵鋼工業의 特性과 需給構造
南宗鉉 著 18 切 判/ 192쪽 高級洋裝/4,600원

30 韓國의 所得分配와 決定要因(上)
朱鶴中 編 18 切 判/ 470쪽 高級洋裝/10,600원

31 韓國의 國土・都市・環境
宋丙洛 編 18 切 判/ 410쪽 高級洋裝/9,000원

32 韓國의 保健財政과 醫療保險
朴宗淇 著 18 切 判/ 272쪽 高級洋裝/6,000원

33 石油化學工業의 現況과 展望
具本英 著 18 切 判/ 236쪽 高級洋裝/5,000원

34 成長과 都市化問題
宋丙洛 E.S. Mills 共著 18 切 判/ 270쪽 高級洋裝/6,000원

35 韓國의 流通經濟構造
林浩奎 著 18 切 判/ 306쪽 高級洋裝/7,000원

36 韓國工業化패턴과 그 要因
金光錫 著 18 切 判/ 272쪽 高級洋裝/6,000원

37 保健醫療資源과 診療生活圈
延河淸 金學泳 共著 18 切 判/ 336쪽 高級洋裝/7,600원

38 韓國의 敎育과 經濟發展
金榮奉 N.F. McGinn 外 18 切 判/ 272쪽 高級洋裝/6,000원

39 貿易・外援과 經濟開發
A.O. Krueger 著 田英鶴 譯 18 切 判/ 256쪽 高級洋裝/5,600원

40 *MACROECONOMIC AND INDUSTRIAL DEVELOPMENT IN KOREA*
朴宗淇 編 18 切 判/ 414쪽 高級洋裝/9,000원

41 *HUMAN RESOURCES AND SOCIAL DEVELOPMENT IN KOREA*
朴宗淇 編 18 切 判/ 384쪽 高級洋裝/8,600원

42 *KOREAN REGIONAL FARM PRODUCT AND INCOME: 1910~75*
A. Keidel 著 18 切 判/ 268쪽 高級洋裝/6,000원

43 韓國의 農村開發
文八龍 潘性紈 D.H. Perkins 共著 18 切 判/ 396쪽 高級洋裝/9,000원

44 需給構造와 物價政策
李 烘 著 18 切 判/ 288쪽 高級洋裝/6,600원

45 經濟開發과 政府 및 企業家의 役割
司空 壹 L.P. Jones 共著 18 切 判/ 410쪽 高級洋裝/9,000원

46 *PRIMARY HEALTH CARE IN KOREA*
延河清 著 18 切 判/ 214쪽 高級洋裝/4,600원

47 韓國 經濟·社會의 近代化
金滿堤 E.S. 메이슨 外 18 切 判/ 530쪽 高級洋裝/11,600원

48 輸出主導型 成長經濟의 外換政策
李天杓 著 18 切 判/ 228쪽 高級洋裝/5,000원

49 韓國의 所得分配와 決定要因(下)
朱鶴中 著 18 切 判/ 432쪽 高級洋裝/9,600원

50 國民經濟와 福祉年金制度
延河清 閔載成 共著 18 切 判/ 428쪽 高級洋裝/9,600원

51 技術革新의 過程과 政策
金仁秀 李軫周 共著 18 切 判/ 402쪽 高級洋裝/9,000원

52 韓國의 經濟開發과 人口政策
R. 레페토 金善雄 外 18 切 判/ 328쪽 高級洋裝/7,000원

53 韓國의 金融發展：1945～80
D.C. 콜 朴英哲 共著 18 切 判/ 334쪽 高級洋裝/7,600원

54 韓國의 賃金構造
朴烜求 朴世逸 共著 18 切 判/ 440쪽 高級洋裝/10,000원

55 *SOURCES OF ECONOMIC GROWTH IN KOREA*
金光錫 朴埈卿 共著 18 切 判/ 238쪽 高級洋裝/5,400원

56 轉換期의 韓國經濟와 金融政策
金重雄 南相祜 共著 18 切 判/ 354쪽 高級洋裝/8,000원

57 北韓의 經濟政策과 運用
延河清 著 18 切 判/ 348쪽 高級洋裝/8,000원

58 地方財政調整制度와 財源配分
李啓植 著 18 切 判/ 280쪽 高級洋裝/6,000원

59 벤처캐피탈의 役割과 課題
姜文秀 著 18 切 判/ 236쪽 高級洋裝/5,000원

60 家計貯蓄과 租稅政策
李啓植 著 18 切 判/ 366쪽 高級洋裝/8,000원

61 韓國의 公企業管理政策
宋大熙 著 18 切 判/ 310쪽 高級洋裝/8,400원

62 韓國經濟의 歷史的 照明
具本湖 編 18 切 判/ 368쪽 半 洋 裝/11,000원

新 刊 案 內

法經濟研究(I) — 李 奎 億 / 李 成 舜 外
半洋裝／18切判／296쪽／定價 7,400원

金利自由化의 課題와 政策方向 — 南 相 祐 / 金 東 源 著
半洋裝／18切判／142쪽／定價 4,400원

韓國財政 40年史〔第一卷～第七卷〕 — 編纂委員會 編
洋 裝／18切判／各卷 700쪽 내외, 各 10,000원 내외

國家豫算과 政策目標(1991) — 李 啓 植 / 盧 基 星 編
半洋裝／18切判／328쪽／定價 8,800원

國民年金基金의 福祉部門 活用方案 — 閔 載 成 / 金 寬 永 外
半洋裝／18切判／132쪽／定價 3,800원

產業化過程과 經濟制度의 對應 — 李 奎 億 編
半洋裝／18切判／182쪽／定價 5,000원

財政統計資料集(1991) — 財政政策室 編
半洋裝／4×6倍判／320쪽／定價 6,000원

KDI圖書會員制 案內

會員에 대한 特典
- 會員加入期間(1년)중 本 硏究院이 發刊하는 一切의 刊行物을 郵送함.
  (단, 自體資料 및 配布制限資料는 제외)
- 本 硏究院 情報資料室 所藏圖書·資料의 利用惠澤을 드림.

會 費 : 60,000원

加入方法
- 직접 本院 發刊資料相談室에 拂入하거나,
- 가까운 郵遞局에서 本院 郵便對替計座(計座番號 : 010983-31-0514919)에 拂入하면 됨.

問 議 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07의 41 우편번호 :'130-012
KDI 발간자료상담실(Tel. 960/3283, 960/4811(交) 305)

빈 면

English Summary of

THE KOREA DEVELOPMENT REVIEW

A Quarterly Journal Published in Korean

by the Korea Development Institute, Seoul, Korea

Vol. 13, No. 4 **Winter 1991**

The Changes and the Determinants of Korea's Market Share in U.S., Japanese, and Other OECD Imports / *185* — ***Yoo Jung-ho***

In Search of "Excess Competition" / *186* — ***Nam Il-chong*** ***Kim Jong-seok***

The Rate Schedule of Income Tax and Vertical Equity / *187* — ***Roh Kee-sung***

Structural Adjustment of Domestic Firms in the Era of Market Liberalization / *188* — ***Seong So-mi***

A Test for Nonlinear Causality and Its Application to Money, Production and Prices / *190* — ***Baek Ehung-gi***

A Simple Test for Optimal Fiscal and Monetary Policy Regimes: The Case of Korea / *190* — ***Whang Seong-hyeon***

Prospects for North Korea's External Opening Policy and North-South Korean Economic Relations / *191* — ***Yeon Ha-cheong*** ***Kim Hyong-won***

The Korea Development Institute was founded in 1971 to conduct independent research on the Korean economy and related matters and to assist government policy making. The research results are published in books, monographs, working papers, seminar papers, etc., and in journals.

Since 1979 the *Korea Development Review,* one of two quarterly journals in Korean, publishes in a concise form the Institute's research results—mainly studies of policy-related economic issues. Views expressed herein are the authors' and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ose of the Editorial Board or the Institute.

President: Koo Bon-ho

Vice President: Nam Sang-woo

Research Staff:

Baek Ehung-gi
Choi Buhm-soo
Choi Jong-won
Choo Hak-chung
Chun Hong-tack
Chung Chin-seung
Jwa Sung-hee
Kang Moon-soo
Kim Ji-hong
Kim Jong-gie
Kim Joo-hoon
Kim Joon-kyung
Kim Kwan-young
Kim Myong-sook
Ko Il-dong
Kwon Soon-won
Lee Duk-hoon
Lee Hong-gue
Lee Kye-sik
Lee Kyu-uck
Lee Won-young
Lee Young-ki
Min Jae-sung
Moon Hyung-pyo
Nam Il-chong
Oum Bong-sung
Park Eul-yong
Park Fun-koo
Park Joon-kyung
Park Woo-kyu
Park Won-am
Roh Kee-sung
Seong So-mi
Shim Sang-dal
Shin Kwang-shik
Son Jae-young
Song Dae-hee
Yeo Woon-bang
Yeon Ha-cheong
Yoo Il-ho
Yoo Jung-ho
Yoo Seong-min
Yoo Yoon-ha
Young Soo-gil

(Family names are given first.)

EDITORIAL BOARD

Editor in Chief: Song Dae-hee
Managing Editor: Park Woo-kyu
Board of Editors: Choi Buhm-soo
Kim Ji-hong
Kim Kwan-young
Yoo Seong-min
Technical Editor: Shin Dong-cho

The Changes and the Determinants of Korea's Market Share in U.S., Japanese, and Other OECD Imports

Yoo Jung-ho

This paper examines Korea's exports of manufactures to the United States, Japan, and other OECD member countries in the 1974–89 period, focusing on the market share in the trade partners' imports. It decomposes the growth of exports into various effects, following the "constant-market-shares" analysis. For this purpose, the entire period is divided into three subperiods: 1974–78, 1978–83, and 1983–89. The paper also estimates a regression model of the market share determination, using the data of Korea's market share in U.S. imports.

In the three subperiods under study, Korea's exports grew at different paces for varied reasons. The average annual growth rate was 28 %, 11 %, and 21 %, respectively. A large drop in the "competitiveness effect", that is, in the market-share growth rate, was mainly responsible for the decline in the export growth rate. The largest drop in the competitiveness effect was found in the light manufactures exports in the second period. The market share did not regain the rapid growth momentum. The main reason for the rise in export growth rate in the last subperiod was the "market-size effect"—a rise in the growth rate of the trade partners' imports.

According to the regression results, high intensities in physical and human capital tended to lower the Korean manufacturing industries' market shares in the United States. This negative correlation was stronger in the case of human capital intensity, suggesting that Korea is relatively poorer in human capital endowment than in physical capital endowment when compared to the United States. This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the market share and each of the two intensities became weaker overtime. This may be interpreted as the consequence of both physical and human capital accumulation which were faster than the labor force growth. Depreciation of the Japanese yen was estimated to have a negative influence on the Korean manufacturing industries' market share in the United States, and this negative influence became stronger each year in the 1980s. This seems to reflect the intensifying competi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exports in U.S. import markets.

The Heavy and Chemical Industry Policy of the 1970s, which promoted a number of selected industries by providing them with various incentives and inevitably discriminated against the rest of the industries, was estimated to have had strong negative effects on the export performance of the light manufacturing industries.

This finding and the largest decline in the "competitiveness effect"—found in the

light manufactures exports in the 1978–83 period—indicate that the Heavy and Chemical Industry Policy was mainly accountable for the drop in the export growth rate during the period. On the other hand, the rise in export growth rate during the subsequent subperiod was greatly impacted by the large scale exchange rate realignments of major currencies, especially by the appreciation of the Japanese yen, and other changes in international economic conditions.

In Search of "Excess Competition"

Nam Il-chong
Kim Jong-seok

Korean firms of all sizes, from virtually every industry, have used and are using the term "excessive competition" to describe the state of their industry and to call for government interventions. Moreover, the Korean government has frequently responded to such calls in various ways favorable to the firms, such as controlling entry, curbing capacity investments, or allowing collusion. Despite such interventions' impact on the overall efficiency on the Korean economy as well as on the wealth distribution among diverse groups of economic agents, the term "excessive competition", the basis for the interventions, has so far escaped rigorous scrutiny.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clarify the notion of "excessive competition" and "over-investment" which usually accompanies "excessive competition", and to examine the circumstances under which they might occur.

We first survey the cases where the terms are most widely used and proceed to examine those cases to determine if competition is indeed excessive, and if so, what causes "excessive competition". Our main concern deals with the case in which the firms must make investment decisions that involve large sunk costs while facing uncertain demand. In order to analyze this case, we developed a two period model of capacity precommitment and the ensuing competition. In the first period, oligopolistic firms make capacity investments that are irreversible. Demand is uncertain in period 1 and only the distribution is known. Thus, firms must make investment decisions under uncertainty. In the second period, demand is realized, and the firms compete with quantity under realized demand and capacity constraints.

In the above setting, we find that there is "no over-investment," *en ante,* and there is "no excessive competition," *ex post.* As measured by the information available in period 1, expected return from investment of a firm is non-negative, overall industry capacity does not exceed the socially optimal level, and competition in the second period yields an outcome that gives each operating firm a non-negative second period profit. Thus, neither "excessive competition" nor "over-investment" is possible. This result will generally

hold true if there is no externality and if the industry is not a natural monopoly.

We also extend this result by examining a model in which the government is an active participant in the game with a well defined preference. Analysis of this model shows that over-investment arises if the government cannot credibly precommit itself to non-intervention when *ex post* idle capacity occurs, due to socio-political reasons. Firms invest in capacities that exceed socially optimal levels in this case because they correctly expect that the government will find it optimal for itself to intervene once over-investment and ensuing financial problems for the firms occur. Such planned over-investment and ensuing government intervention are the generic problems under the current system. These problems are expected to be repeated in many industries in years to come, causing a significant loss of welfare in the long run.

As a remedy to this problem, we recommend a non-intervention policy by the government which creates and utilizes uncertainty. Based upon an argument which is essentially the same as that of Kreps and Wilson in the context of a chain-store game, we show that maintaining a consistent non-intervention policy will deter a planned over-investment by firms in the long run. We believe that the results obtained in this paper has a direct bearing on the public policies relating to many industries including the petro-chemical industry that is currently in the center of heated debates.

The Rate Schedule of Income Tax and Vertical Equity

Roh Kee-sung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termine whether the rate schedule of the Korean income tax system embodies the theoretically desirable distribution of the tax burden by income classes. The paper follows the approach of Young (1990) who has estimated the utility function and calculated the magnitude of sacrifice, i.e., the tax burden.

The main point of the study is to estimate the utility function. The estimation results may differ if different data sets are used. Therefore, this paper employs the effective as well as the nominal tax rate schedule.

The findings derived in this paper are 1) that the effective rate schedule is more appropriate in estimating the utility function; 2) that the middle class has born the relatively heavier burden over time; 3) that the current income tax credit scheme curtails the tax burden on the middle class while intensifying the tax burden of the lower and upper income classes; 4) that reducing the amount of deduction moves the distribution of tax burdens by income classes closer to the theoretically desirable model; 5) that the rate schedule of the Korean income tax system, particularly in 1991, did not conform to the desired model as did the tax systems of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Italy, Japan, and Germany.

Structural Adjustment of Domestic Firms in the Era of Market Liberalization

Seong So-mi

Market liberalization progressing simultaneously with high and rapidly rising domestic wages has created an adverse business environment for domestic firms. Korean firms are losing their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n comparison to firms from LDC(Less Developed Countries) in low-tech industries. In high-tech industries, domestic firms without government protection (which is impossible due to the liberalization policy and the current international status of the Korean economy) are in a disadvantaged position relative to firms from advanced countries.

This paper examines the division of roles between the private sector and the government in order to achieve a successful structural adjustment, which has become the impending industrial policy issue caused by high domestic wages, on the one hand, and the opening of domestic markets, on the other. The micro foundation of the economy-wide structural adjustment is actually the restructuring of business portfolios at the firm level. The firm-level business restructuring means that firms in low-value-added businesses or with declining market niches establish new major businesses in higher value-added segments or growing market niches.

The adjustment of the business structure at the firm level can only be accomplished by accumulating firm-specific managerial assets necessary to establish a new business structure. This can be done through learning-by-doing in the whole system of management, including research and development, manufacturing, and marketing. Therefore, the voluntary cooperation among the people in the company is essential for making the cost of the learning process lower than that at the competing companies. Hence, firms that attempt to restructure their major businesses need to induce corporate-wide participation through innovations in organization and management, encourage innovative corporate culture, and maintain cooperative labor unions.

Policy discussions on structural adjustments usually regard firms as a black box behind a few macro variables. But in reality, firm activities are not flows of materials but relationships among human resources. The growth potential of companies are embodied in the human resources of the firm; the balance of interest among stockholders, managers, and workers of the company brings the accumulation of the company's core competencies. Therefore, policymakers and economists shoud change their old concept of the firm as a technological black box which produces a marketable commodities. Firms should be regarded as coalitions of interest groups such as stockholders, managers, and workers.

Consequently the discussion on the structural adjustment both at the macroeconomic level and the firm level should be based on this new paradigm of understanding firms.

The government's role in reducing the cost of structural adjustment and supporting should the creation of new industries emphasize the following: First, government must promote the competition in domestic markets by revising laws related to antitrust policy, bankruptcy, and the promotion of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General consensus on the limitations of government intervention and the merit of deregulation should be sought among policymakers and people in the business world. In the age of internationalization, nation-specific competitive advantages cannot be exclusively in favor of domestic firms.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a domestic firm derives from the firm-specific core competencies which can be accumulated by internal investment and organization of the firm.

Second, government must build up a solid infrastructure of production factors including capital, technology, manpower, and information. Structural adjustment often entails bankruptcies and partial waste of resources. However, it is desirable for the government not to try to sustain marginal businesses, but to support the diversification or restructuring of businesses by assisting in factor creation. Institutional support for venture businesses needs to be improved, especially in the financing system since many investment projects in venture businesses are highly risky, even though they are very promising. The proportion of low-value added production processes and declining industries should be reduced by promot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factory automation. Moreover, one cannot over-emphasize the importance of future-oriented labor policies to be based on the new paradigm of understanding firm activities. The old laws and instititutions related to labor unions need to be reformed.

Third, government must improve the regimes related to money, banking, and the tax system to change business practices dependent on government protection or undesirable in view of the evolution of the Korean economy as a whole. To prevent rational business decisions from contradicting to the interest of the economy as a whole, government should influence the business environment, not the business itself.

A Test for Nonlinear Causality and Its Application to Money, Production and Prices

Baek Ehung-gi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primarily to introduce a nonparametric statistical tool developed by Baek and Brock to detect a unidirectional causal ordering between two economic variables and apply it to interesting macroeconomic relationships among money, production and prices. It can be applied to any other causal structure, for instance, defense spending and economic performance, stock market index and market interest rates etc. A key building block of the test for nonlinear Granger causality used in this paper is the correlation. The main emphasis is put on nonlinear causal structure rather than a linear one because the conventional *F*-test provides high power against the linear causal relationship. Based on asymptotic normality of our test statistic, the nonlinear causality test is finally derived. Size of the test is reported for some parameters. When it is applied to a money, production and prices model, some evidences of nonlinear causality are found by the corrected size of the test. For instance, nonlinear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production and prices are demonstrated in both directions, however, these results were ignored by the conventional *F*-test. A similar results between money and prices are obtained at high lag variables.

A Simple Test for Optimal Fiscal and Monetary Policy Regimes: The Case of Korea

Whang Seong-hyeon

The optimal choice of the tax rate and the inflation rate framework is extended to yield relevant interpretations for the optimal fiscal and monetary policy regime in Korea. To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 budget and monetary growth in different environments of policy coordination, two models assuming different degrees of fiscal dominance are developed. By modelling differing institutional arrangements of the fiscal and the monetary authority from an optimal government finance viewpoint, we find the optimal relationship among some important fiscal and monetary variables.

By testing the existence of the relationship empirically, we fi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optimal policy-mix regime in Korea.

The first model—the strong from of fiscal dominance—studies the optimal collection of seigniorage in a period-by-period optimization with standard assumptions on the income velocity of money, deriving a general testable result: the optimal inflation/tax rate ratio co-vary with the marginal revenue ratio. The second model—the weak form of fiscal dominance—studies an implication of the inflationary bias of discretionary monetary policy in the presence of fiscal side distortions. This model shows that the tax rate and the inflation rate can have a positive correlation.

Empirical tests of the theoretical results are done for the Korean economy for 1972–1989 period. The test results show that the macroeconomic policy regime in Korea can be characterized by the strong form of fiscal dominance, implying the importance of the government budget in explaining money growth and inflation.

Prospects for North Korea's External Opening Policy and North-South Korean Economic Relations

Yeon Ha-cheong
Kim Hyong-won

The promotion of economic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s significant in two ways. First, the pursuit of economic interest can lead gradually to the unification of the national economies. Second, economic relations can serve as the first stride toward political reunification.

There are, however, many difficulties in conceiving a strategy for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because of their differences in ideology and socio-economic system. Under these circumstances, a bid by either the North or the South to consider its specific ideology or socio-economic system absolute and to impose them on the other side would inevitably lead to confrontation and collision and deepen the division of the country. Therefore, steps to expand and develop economic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and comprehensive exchanges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with due regard to the development of bilateral relations, are in full accord with the interests of the both sides.

It is clear that North Korea's changing attitude toward its environmental conditions is neither a policy of opening nor an ideological shift toward pragmatism, as has occurred in the Eastern European countries. Instead, it is a temporary tactic for breaking out of the economic stagnation caused by its rigid economic structure. In this light, we must

Working Papers from KDI

8920	Korea's Pension System and Major Policy Issues	**Min Jae-sung & Tchoe Byong-ho**
8921	An Institutional Analysis of the Size Distribution of Manufacturing Establishments	**Jeffrey B. Nugent & Mustapha K. Nabi**
8922	Three Essays on Korean Privatization Policy	**Song Dae-hee**
8923	Controlling Stock Externalities	**Ko Il-dong**
8924	Recent Macroeconomic Performance and Industrial Structural Adjustment in Korea	**Koo Bon-ho & Bark Tae-ho**
8925	Debt Buybacks and Forgiveness in a Model with Voluntary Repudiation	**Peter B. Kennen**
8926	The Economic Theory of Bureaucracy Applied to Public Pricing and Supply of Congestible Public Goods	**Roh Kee-sung & Gene E. Mumy**
8927	International Investment During the Flexible Exchange Rate Period: Firm Behavior and Policy Choices in Korea	**Jongmoo Jay Choi**
8928	Macroeconomic Shocks and Exchange Rate Dynamics	**Cheol S. Eun & Shim Sang-dal**
8929	Major Trends Likely to Influence Future Social Development Patterns	**Yeon Ha-cheong & Kim Kwan-young**
8930	Review of Current Social Development Policy and Planning	**Kwon Soon-won**
8931	International Capital Market Integration and the Asset Pricing Mechanism	**Cheol S. Eun**
8932	Variations in the Size Distribution of Korean Manufacturing Establishments Across Sectors and Over Time	**Jeffrey B. Nugent**
9001	Economic Development and External Policy in Korea	**Kim Jae-won**
9002	A New Role of Fiscal Policy and Financing Social Development in Korea	**Lee Kye-sik**
9003	Changing Japanese Trade Patterns and the East Asian NICs	**Park Yung-chul & Park Won-am**
9004	New Challenges to the Korean Economy and Their International Implications	**Young Soogil**
9005	The Trilateral Trade Relation Among the Asian NIEs, the U.S., and Japan	**Yoo Jung-ho**
9006	Problems of Integrating the USSR Economy into the World Economy	**Abel G. Aganbegyan**
9007	Structure and Evolution of Federal Funds Market in the U.S.	**Choi Buhm-soo**

9008	Korea: Income and Wealth Distribution and Government Initiatives to Reduce Disparities	**Kwon Soon-won**
9009	The Prospects for the Asia-Pacific Economies in the 1990s and Their Policy Implications: A Northeast Asian Perspective	**Young Soo-gil**
9010	Exchange Rate Policy for the East Asian NICs	**Park Yung-chul & Park Won-am**
9011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Transition from a Planned to a Market Economy in the Eastern European Countries	**Karl Heinrich Oppenländer**
9012	Bridging the Chasm: Cooperative Economic Rel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Yeon Ha-cheong**
9013	Analysis of and Reform Proposals for "The Land Problem" in Korea	**Son Jae-young**
9014	Alternative Social Development Policy and Planning Scenarios Towards the Year 2000 and Beyond: The Case of Korea	**Kim Kwan-young & Kim Won-shik**
9015	Korean Industrial Policy in the 1970's: The Heavy and Chemical Industry Drive	**Kim Ji-hong**
9016	Ownership-Management Relations in Business: with Special Reference to Business Groups in Korea	**Lee Kyu-uck**
9017	The Industrial Policy of the 1970s and the Evolution of the Manufacturing Sector in Korea	**Yoo Jung-ho**
9018	US Trade Policy and Its Effects on Korean Exports	**Nam Chong-hyun**
9019	A Proposal for Tax Reform in Korea	**Roh Kee-sung**
9020	Money Markets and Monetary Policy in Korea	**Kang Moon-soo**
9021	The Dilema of Democratic Politics and Economic Development in Korea	**Oh John Kie-Chiang**
9101	The Philippines and South Korea: Divergent Growth and A Test of Hypothesis	**Robert Z. Aliber**
9102	Problems of Urbanization and the Growth of Seoul, Korea	**Kim Jong-gie, Kim Kwan-young & Son Jae-young**
9103	Tax Reform in Korea	**Kwack Tae-won & Lee Kye-sik**

Working Papers from KDI

9104	The KDI Quarterly Model of the Korean Economy	**Yoo Yoon-ha**
9105	The External Adjustment of the Korean Economy	**Yoo Yoon-ha & Park Won-am**
9106	Technical Efficiency in Korea	**Yoo Seong-min**
9107	Environmental Consideration in Energy Development	**Chung Chin-seung**
9108	The Challenge of the European Single Market to Korea's Banking Sector	**Kang Moon-soo**
9109	Social Development Policy and Planning in Korea	**Kwon Soon-won**
9110	Distributional Consequences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in Korea	**Kwon Soon-won**
9112	Rural Industrialization Policy in Korea: Past Performance and Future Direction	**Kim Jong-gie**
9113	Urbanization in a Rapidly Growing Economy: An Analysis of the Income Distribution Aspects of Korean Urbanization Problems	**Lee Bun-song**
9114	Policy Alternatives for Farm Income Enhancement and Farm Productivity	**Song Dae-hee**
9115	Korean Public Enterprise Performance	**Song Dae-hee**
9116	Political Economy of Protection Structure in Korea	**Yoo Jung-ho**
9117	Prospects for North-South Korean Economic Relations and the Evolving Role of Korea in Continental Northeast Asian Economic Development	**Yeon Ha-cheong**
9118	Korea's Local Public Finance at Crossroads	**Son Jae-young**
9119	Univariate Properties of The Korean Economic Time Series	**Choi In**